

# 수산업 생산 전국 1위 '어도 전남' 어촌경제 직격탄

### 전북 등 가격 폭락 속 소비자 91% "수산물 소비 줄일 것" 불안감 확산 수산물 이력제 강화·방사능 검사 확대 나서...정부 미온적 입장에 한계

#### 전남도 대책 마련 전전긍긍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쏟아내기로 결정하면서 전남 수산업 자체가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일본에서 보이는 (외국의) 수입 규제 등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근거해 조기에 철폐하도록 요구한다"는 입장까지 밝혀 자칫 신뢰할 만한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 확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남도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 판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다, 관련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 뾰족한 대책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면 소비자들의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수산물 소비 위축 및 전남지역 어민들의 매출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수산물 생산액(지난해 기준 3조 907억원) 전국 1위, 생산량(186만 5000 t) 전국 1위다. 미역·다시마·김·굴·전복·갯새우·넙치·홍합류 등 15개 수산물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93.8%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어가 수(1만 5723가구)도 전국 37%로 가장 많고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3만 4620명)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내 최대 수산지라는 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미 전복 등 일부 수산물은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비 급감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생산 어민들이 파산하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복 산지 가격은 큰 전복(kg당 8마리) 2만3217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5.5%나 폭락했고,

중간 크기 전복(kg당 12마리)은 1만9739원으로 22.8% 하락했으며, 작은 전복(kg당 20마리)은 1만5391원으로 19.5% 떨어졌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당장, (새)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2021년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이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으로 응답했고 여기구 의원실 주최로 지난 5월 열린 토론회에서는 2013년 원전오염수 누출 때도 국내 전통시장에서는 약 40%, 대형마트와 도매시장에서도 각각 20% 수준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한 것을 들어 어업 외 수산물 가공·유통 및 판매업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데 따른 불안감도 여전하다.

정부는 수산업과 관련 산업, 연안지역 경제가 입을 수 있는 피해 대책에 필요한 실질적인 입법적 조치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전남도가 추진하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 검사 수준이라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

전남도도 전담팀을 꾸리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17개~21개 품목)를 강화하고 원산지표시 품목(15~20개) 확대, 해역(4곳) 방사능 실시간 측정 방안과 대규모 소비촉진행사, 피해보전금 지급·정부 구매 건의, 특별법 및 종합대책 마련, 소비 위축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을 건의하는 것 외에 실질적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어민들 사이에서는 그러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해 어민들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해 '75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한 만큼 일본측 피해 배상 규모에 우리측 보상 방안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총괄대책위원회 및 소속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으로 오염수 해양투기 철폐 촉구 결의문을 전달하려다 일본대사관 측의 결의문 수령 거부로 경찰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높인다. 어업인 피해가 나타날 경우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최근 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법을 통해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업(어업·양식어업),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등 관련산업 피해보전, 수산물 정부 비축 및 구매, 판매촉진 및 홍보 등의 실시, 지역경제(관광, 소상공인 등)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민주, 야권·시민사회와 장외집회 '총력저지'

### 대책위, 日 대사관 항의 방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는 24일부터 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총력 저지투쟁'에 돌입했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은 시민사회와 연대, 촛불 집회 등 장외 집회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민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강력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며 "응답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들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일본이 방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 나라 정상 간에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지지 또는 양해가 있었다는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주권 및 국익 포기만으로도 이미 일본의 방류 범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 없다"며 "야 3당과 시민사회, 국민과 힘을 합쳐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에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은 23일 저녁 국회 본청 앞에서 당직자

및 보좌진 등과 함께 촛불집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주말에는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장외 집회에 나설 방침이다. 9월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엔인권 이사회 등 국제기구에 당 소속 의원들을 보내 오염수 방류 중단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장외 집회와 관련, 김한규 원내대표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제적인 당 행사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 같은 뜻을 가진 국민이 주관하는 행사에 저희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유엔인권이사회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국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평양은 기사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원자력 카르텔의 하수구가 아니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야권의 총력 투쟁 방침에 민심이 얼마나 호응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점에서 민심의 폭발성 측면에서 과거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동보다 더 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 른 한 편으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파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민심의 반발이 크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측정기 도입하고 검사 샘플 늘리고...지역 유통업계 대책 마련 분주

### 대체상품·안전 상품 확보 등 고심 국내산 수산물 사재기 우려도 확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지역 유통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2011년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을 시인한 2013년에 수산물 소비가 급감한 전례가 있어서이다.

22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의 박준모 연구원에 따르면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11년 부산 감천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본산 명태와 갈치 거래량은 각각 94.2%, 97.2% 줄었다.

원전 오염수 누출이 확인된 2013년엔 국내 전통 시장에서 약 40%, 대형마트와 도매시장에서 각각 20% 수준으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유통업계는 대체 상품 개발과 소비자들의 우려를 지울 만한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이날 광주·전남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먼 지역의 민물고기, 갑각류 등을 신규 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정기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는 지역 수협 위판장에서만 상품을 구매한다. 또 방사능 검사성적서 확인된 제품만을 취급하고, 상품과학연구소를 통해 방사능 관련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상시 검사와 정밀 분석 장비(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분광분석기) 도입을 검토 중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부터 전국 매장에 수산물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를 도입하고 판매 제품을 전수 검사 중이다.

이마트는 방사능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로 샘플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식품안전센터에서 진행되는 주요 포구별 수산물 샘플 안전성 검사를 분기별 1회에서 주 4회로 확대한 상태다.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국내산 수산물의 사재기도 우려된다. 앞서 지난 6월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천일염 품귀 현상을 빚은 바 있다. 천일염은 정부의 비축분 방출에도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에 대비해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을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750억원 편성한 상태다. 또 민간 구매 지원 예산으로 1150억원, 제로페이·한글 등을 포함한 상생할인 예산으로 640억원을 마련했다.

기존 제도인 어업인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식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